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대검찰청

대변인실

전화 02-3480-2100 / 팩스 02-3480-2704

보도자료
2021. 7. 8.(목)

자료문의 : 마약·조직범죄과
전화번호 : 02-3480-2280
주책임자 : 마약·조직범죄과장

제 목

대검 반부패강력부 보이스피싱 범죄 강력 대응 지시

-전담검사 지정 등 수사역량 집중 /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처벌 강화

- 보이스피싱 범죄는 노인, 경제적 약자 등 서민들이 주된 피해자로, 연간 피해신고 건수는 3만 건 이상, 피해금액은 수천억 대에 이르고, 특히 2020년에는 피해금액이 약 7,000억 원에 달하는 등 날로 증가세를 보여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함
 -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넘어 생명까지 포기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피해 태양, 피해규모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임
- 이에 대검찰청은 오늘(7. 8.) ▲ 각 검찰청별로 전담검사를 별도로 지정,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밝혀 범죄단체로 의율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하고, ▲ 검사·수사관 등 수사기관 사칭 범행은 끝까지 추적하며, ▲ 총책은 물론, 수거책·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중히 처벌될 수 있도록 중형을 구형하는 등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였음
- 또한 대검찰청 반부패·강력부에 자체 T/F를 구성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, 경찰·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도록 최선을 다하겠음

1

보이스피싱 범죄 적극 대응 배경

-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막대한 피해를 양산
 - 보이스피싱 범죄는 노약자, 주부, 학생, 회사원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전국민이 잠재적 피해자에 해당하고, 건전한 금융 거래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훼손 등 그 피해가 크나, 그 동안의 집중 단속과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
 - 신고된 피해는 연간 3만 건 이상, 피해금액은 수천억 대에 이르는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고 있고, 피해규모 또한 2020년 약 7,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

최근 3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등 현황 (경찰청)

연도	발생건수	검거건수	검거인원	피해금액(억)
2018년	34,132	29,952	37,624	4,040
2019년	37,667	39,278	48,713	6,398
2020년	31,681	34,051	39,713	7,000

- 범행수법의 조직화·지능화로 인해 피해규모 확산
 - 100명 이상의 대규모 기업형 조직이 적발되는 등 조직화된 역할분담을 통해 범행이 이루어지거나, 문서위조,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, 전문직 종사자까지 피해를 입는 등 연령과 직군을 가리지 않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
 -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는 재산상 피해를 넘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까지 잃는 일도 발생함

※ '20. 1.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선량한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착각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검박하며 사기범행을 저질렀고,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으로 결국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례 발생

2

향후 대응 방안

- (수사역량 집중) ▲ 강력 전담부서가 설치된 5개 청(서울중앙지검, 인천·부산·광주·대구)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하여, 적극적으로 보이스포싱 조직의 실체를 밝혀 범죄단체로 의율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, ▲ 선량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검사 등을 사칭한 조직에 대하여는 끝까지 수사하여 엄벌, ▲ 현금 수거책·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수사
- (처벌 강화) 적발된 금액과 상관 없이, 조직의 총책에 대하여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, 단순 가담자에 대하여도 중형 구형

주요 수사사례

●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포싱 범행

-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“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직원에게 맡기라”고 거짓말하여,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8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포싱 조직원들 구속 기소(‘20. 9. 서울동부지검)
- 검사,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“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. 무죄를 입증하려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라”고 거짓말하여,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약 4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포싱 조직원들 구속기소(‘21. 4. 부산지검, 피해자 1명 사망)

범행수법은 ① 검사,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, ② 범행 연루 여부 확인을 위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, ③ 전화로 임의수사를 받는 중, 전화가 끊기면 수사방해로 간주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지명수배된다, 전화 중단 방지를 위해 휴대용 배터리를 준비하고,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 기능을 모두 끄고, ④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 피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 인출하여 지정된 보관함에 넣어두라는 순으로 거짓말함(피해자들 녹음파일 확인 결과, 피해자들은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7~8시간 동안 전화를 끊지 못하고 통화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)

- **단순 가담책**

-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억 1,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수거책 구속기소('20. 4. 부산지검)

3

향후 계획

- 대검찰청은 오늘(7. 8.) 일선 검찰청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음
- 향후 대검찰청 반부패·강력부에 자체 보이스피싱 대응 T/F를 구성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, 경찰,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☒